

민형배 시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동·서부권으로 확장

신소재 특구·소부장 산단 조성 등 산업 생태계 구축

“20조 통합지원금에 반도체 인프라 투입 비용 반영”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생태계의 동·서부권 확장을 비롯해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회의에 따르면 민 시장은 최근 의회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공공항 이전, 공

공기관 이전, 국립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을 뿔이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에만 산업을 집중시키지 않고 광주특별시 동·서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권에는 반도체와 연계한 신소재 특

구, 서부권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광주권에 대규모 뿔이 들어이지만 관련 산업과 기업, 연구 기능 등을 광주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해 반도체 산업의 효과를 지역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반도체 산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민 시장은 광주특별시가 유치를 요구할 핵심 기관 10여곳에 3~4곳을 포함시켰으며,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기관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작성한 간담회 결과 문건에 기존 공개 발

언보다 진전된 표현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민 시장이 비공개 투자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반도체 뿔이 4기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9기로 계획돼 있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기록됐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 직속 반도체실에 1~2급 상당의 전문가를 실장으로 두고 3급 국장이 반도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집행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20조원 통합재정지원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다.

민 시장은 “통합재정지원금은 전액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연간 1조5000억원 가량을 반도체 인프라에 투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별시 이관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시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포괄재원으로 20조원가 일괄 지원되기도 반도체 기반시설이나 국가기관 이관 등 특정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지원금 일부를 균형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 조성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통합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7년도 예산 운용 원칙도 제시됐다.

내년 예산을 기존 전남 약 12조원, 광주 약 7조5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각각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예산담당관은 “통합됐기 때문에 전남과 광주에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국립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의대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민석 “지방주도성장 뒷받침 ‘지방주도 정치’ 펴겠다”

“중앙당, 주 2~3일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며 업무”

“민생·실용 확장 ‘당원’ 선택…‘새벽 당대표’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는 19일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방주도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 의를 부산광역시당에서 열고 “앞으로는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사는 정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는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고, 또 대표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주 2일 내지 3일 이상은 전 통척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위원회도 한두 번 정도는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라며 “현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의 ‘제2차 부산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이라며 “앞으로는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이고 금요일에 할 3차 회의는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지도부의 노선도 천명했다.

김 대표는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 당원과 대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이라며 “노선과 방향이 민생·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다”며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다. 능력주의로 하겠다”며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에 있어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원을 해나가겠다”며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벽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총리일 때 새벽 총리를 자임했는데 당대표가 되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든든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과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며 “지도부는 밤을 향해서 힘을 모으고 안에서는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고위원회의의 기준에 최고위원들의 발언 외에는 비공개였던 회의방식을 바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민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기강을 잡겠다는 뜻이라는 해석과 함께, 일부 최고위원들의 계파적 태도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런 김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공개 원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아가 의원총회 공개도 같이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 구성은 당심(黨心)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송형곤 “김 대표, 지방의회법 지원 약속”

민주당·지방의회 협력 방안 등 의견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회의 송형곤 의장(사진)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법’ 통과 지원 약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장은 지난 18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은 김민석 대표와 만나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당과 지방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확보한 20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현안과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특별시장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당 차원에서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중앙당 운영 역시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매주 이를 이상 시·도당을 찾아 지역에 머물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지역의 주요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국

정에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방정부위원회와 시·도당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의회의 협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지방의회법은 더불어민주당 참총은 지방정부위원장에 임명된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회의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으로 91명의 의원이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확대된 행정 규모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의원 개인의 권한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광주특별시장회의도 320만 특별시장의 목소리가 광주특별시의 정책과 미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초대 위원장이 지역 대학과 특별시의회, 특별시·교육청을 잇달아 찾으며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안도걸 초대 특별시장위원장, ‘민생성과 플랫폼’ 시동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초대 위원장이 지역 대학과 특별시의회, 특별시·교육청을 잇달아 찾으며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당과 지방정부, 의회,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호남 반도체 투자와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19일 지역 주요 기관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통합특별시당이 지역 민생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통합특별시당을 특별시와 의회, 중앙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민생성과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당이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 투자로 구체화해 주요 현안의 해결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학·특별시의회·특별시·교육청과 잇단 간담회

호남 반도체·국립의대 등 핵심 현안 공동 대응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김 대표가 특별시당이 특별시와 특별시의회 사이에서 긴강한 협력과 견제를 뒷받침하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전남광주에서 지역 민생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첫 협력 행보는 지역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첨단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 대학이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의 인재 공급과 기술개발을 담당하며 전남광주 경제 대도약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별시의회를 찾아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별시와 의회 간 협력·견제 관계를 정리하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별·분야별 갈등과 현안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형배 특별시장, 김대중 특별시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는 정례적인 당정협의회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호남 반도

체 투자와 국립의대 신설을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 국회 예산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시당이 특별시와 의회, 교육청,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를 하나의 협력망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건강하게 견제하되 판단의 기준은 320만 특별시장의 민생과 전남광주의 발전에 있어야 한다”며 “말과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현안을 풀고 예산을 확보하며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 중심의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시당은 지역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례화하고 호남 반도체 투자와 국립의대 신설, 행정통합 안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민이 뽑은 명소…전남광주 1032곳 선정

순천만 국가정원 지역 최다 득표…전국 종합순위 6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행 명소에 전남 광주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 담양 죽녹원 등 1032곳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의 국민투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국민 4만145명이 참여해 총 153만8035표를 행사했으며, 100개 주제별 명소 9883개가 선정됐다. ‘100X100 프로젝트’는 여행지와 작가 등 여행 전문가 100인이 여행 주제와 후보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대표 명소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선정 명소로 전남·광주는 1032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이 1261곳으

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88개, 강원 1058개 순이었다. 전남광주 명소 중 순천만국가정원은 지역 내 최다 득표 명소로 꼽힌 데 이어 여러 주제에서 받은 표를 합산한 전국 명소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담양 죽녹원, 순천만습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도 전국 순위에서 각각 7.8, 9위를 차지했다. 선정 결과는 ‘대한민국 구성구석’과 연결된 별도 누리집(www.spot100x10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명소 조희 수 등을 반영해 명소 순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설·추석 연휴와 휴가철 등에 관심이 높은 여행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